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2월 14일 (음력 1월 10일) 목요일

# 전남도 '제2 광주형 일자리' 경쟁 가세…팀 가동

## 文정부, 군산·구미 등 구체적 밑그림 경쟁 '시동'

## 김영록 지사 "전남형 일자리 발굴, 전략산업 육성"

문재인 정부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남도도 '전남형 일자리'라는 문패를 내걸고 사업 발굴 등 경쟁에 뛰어들었다.

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임금은 낮추고 지차단체가 복지를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극적으로 타결된 뒤 청와대는 올해 상반기 최소 한, 두 곳에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시작됐다.

현재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중심으로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자수출도시 구미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대기업과 연계해 구미국가산단에서 전기차, 반도체 등을 통해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부산과 인천, 충청 등도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찾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 '전남형 일자리'로 경쟁에 가세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한국경제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환영받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일자리정책에 맞춰 전남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조업의 토대 위에서 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전남형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구체적 액션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일자리정책본부 산하의 담당팀을 지정, 전남형 일자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으로 기존 주력 사업과 미래 전략산업 등을 토대로 아이템 발굴에서 나서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남이 고용효과가 큰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발굴해 지역발전과 함께 인구 200만명 도민 시대를 부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지사가 전남형 일자리 발굴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고용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제2의 광주형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전남은 수도권과 멀고 산업기반도 열악해 큰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만큼 광주형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면서 "정부도 낙후된 전남을 감안해 우선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5.18 왜곡 국회의원 제명하고 즉각 사죄하라"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과 관련 비판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하고 있다.

## '5·18 왜곡 처벌 촉구' 광주서 16일 범시민궐기대회

### 5월·시민단체 세력과 정당·기관 집결

### 한국당 3인 퇴출·역사왜곡처벌법 촉구

5월단체·광주시민사회단체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인사의 '5·18민주화운동 망언'에 반발, 범시민적 단체를 결성해 첫 궐기대회를 연다.

13일 '자유한국당 3인 망언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5월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범시민궐기대회를 연다.

국회 공청회에서 5·18과 5월 유공자를 폄훼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3인과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책임을 묻고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5월·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15일 오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5·18 역사왜곡 처벌·근절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 등을 논의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한국당 망언 의원 3인 퇴출'과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를 주요 활동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계획이다.

범시민운동본부에는 앞서 출범한 5·18진실규명·역사왜곡대책위원회 참여단체와 기관이 대부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시민운동본부 측은 5월·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학계, 종교계, 정당과 기관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와 5·18진실규명·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면서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 3인의 퇴출과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범시민적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5월·시민단체 대표단 10여 명은 국회를 찾아 원내 5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신봉우 기자

## Photo 漫評

### 길이 아닌 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12일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전두환의 길을 가고 있고 김영삼 정부는 부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당이 이말로 전두환 망령, 박근혜 굴레에 갇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반역사적인 일을 해서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며 "전두환 망령, 박근혜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당이 거듭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보도 직후 내 입장문에서 "김영삼 정부때 5.18특별법이 제정(1995.12.21)되어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